

KIPF ISSUE PAPER No.90

통권
제 90호

조세재정 브리프

2020. 1. 22

www.kipf.re.kr

경제주체별 부채현황 및 시사점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sjyoon@kipf.re.kr

- 1 들어가는 글
 - 2 민간부문 부채와 정부부문 부채 간의 관계
 - 3 경제주체별 부채현황
 - 4 시사점
- 참고문헌





요약

- ▶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정부부채로 인해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단기적 측면에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 ▶ 그러나 외생적 충격 등으로 인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경우, 높은 수준의 민간부채가 한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 따라서 민간부문의 부채수준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민간부채의 정부부채로의 이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부부채도 증가 속도와 수준을 조율하는 정세(精緻)한 정책운용이 필요
- ▶ 이를 위해 정책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한 적절한 감독기능과 더불어 정부부문의 부채수준뿐 아니라 가계와 기업까지 포함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부채수준과 구조를 모니터링 하는 것을 제안

※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윤성주, 「경제주체별 부채현황 및 시사점」, 『재정포럼』, 2019.11.과 윤성주 · 정도진 · 장진석 · 이용성, 『국가부채 현황 및 재정위험 관리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중 일부 내용을 발췌 · 요약한 것임

1 들어가는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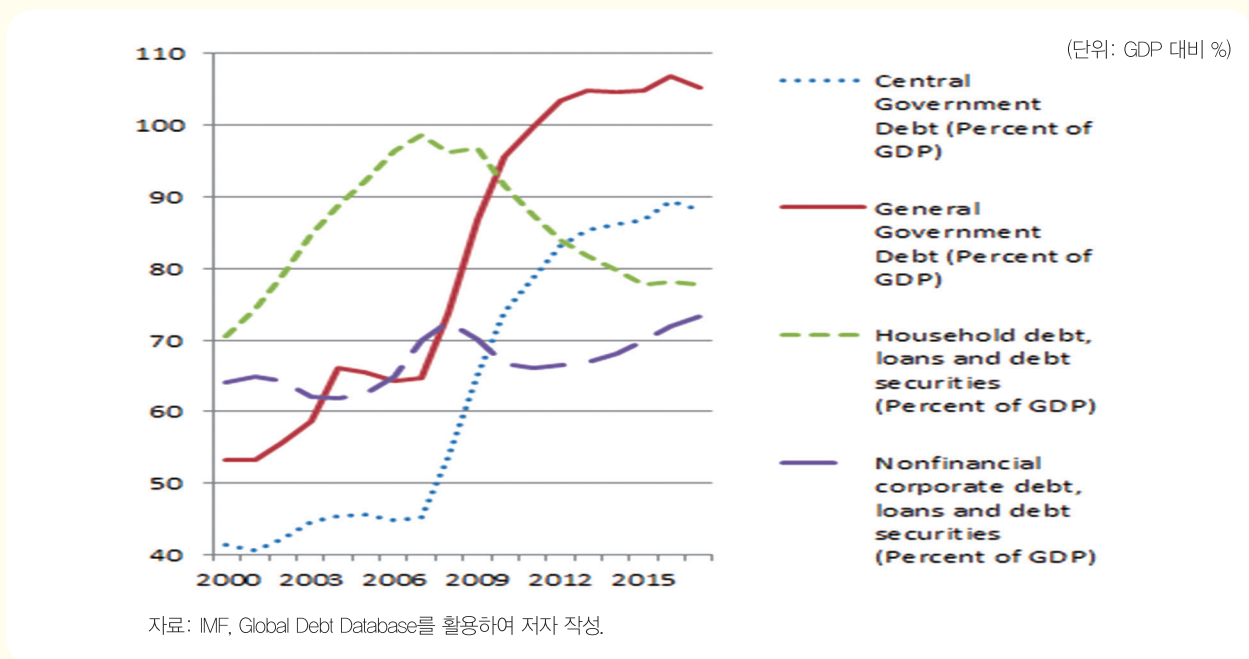
- ▶ 현재 한국이 직면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기조는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부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저성장 및 고령인구비중의 증가로 인해 정부의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재정지출에 대한 부담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 이와 같은 논쟁들은 지금까지 주로 정부부문의 부채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염두에 둔다면, 민간부문의 부채수준 또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외생적 충격 등으로 인해 위기가 발생할 경우, 민간부문의 부채가 정부부문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정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
- ▶ 이에 본고에서는 민간부문 부채와 정부부문 부채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의 경제주체별 부채 현황에 근거하여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KIPF ISSUE PAPER

2 민간부문 부채와 정부부문 부채 간의 관계

- ▶ 가계와 기업과 같은 민간의 부채수준이 과도한 경우에는 경제에 부정적인 외생적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민간의 부채가 정부부문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과거 여러 국가의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예컨대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발생지인 미국의 경우, 가계부채 수준이 감소하면서 정부부채가 증가하는 모습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그림 1] 미국 경제주체별 부채 추이



- ▶ 요컨대 이자율 상승, 경기둔화 등과 같은 경제에 부정적 상황이 발생하면, 민간은 디레버리징을 통해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되며, 보유하고 있던 부채의 수준이 높을수록 경기에 대응하는 디레버리징의 규모는 크게 나타남
- ▶ 이때, 민간의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지 못하거나 부실운용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 위기대응 과정에서 부실기관에 대한 정부의 구제금융,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이 발생하며, 이를 통해 민간의 부채가 정부부문으로 이전되는 경험이 과거 다수의 국가에서 나타남
 - 1980년대 말~1990년대 중반 북구 3국의 금융위기,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 또한 민간부문에서 정부부문으로 부채가 이전되면서 정부부문의 부채 및 부담 증가로 인해 경제위기가 재정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2010년 유럽재정위기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일부 확인할 수 있음
 - 과도한 정부부채 수준으로 인해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 부재,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하에서 위기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심화, 그리고 낮은 정부신뢰 등은 위기 발생 시 해당국으로부터의 자금이탈, 신용경색 등을 초래
- ▶ 특히, 정부부문의 부채수준이 민간보다 높았던 그리스, 이탈리아뿐 아니라, 정부부문의 부채수준이 민간보다 낮았던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과 같은 국가들도 재정위기를 경험하였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3 경제주체별 부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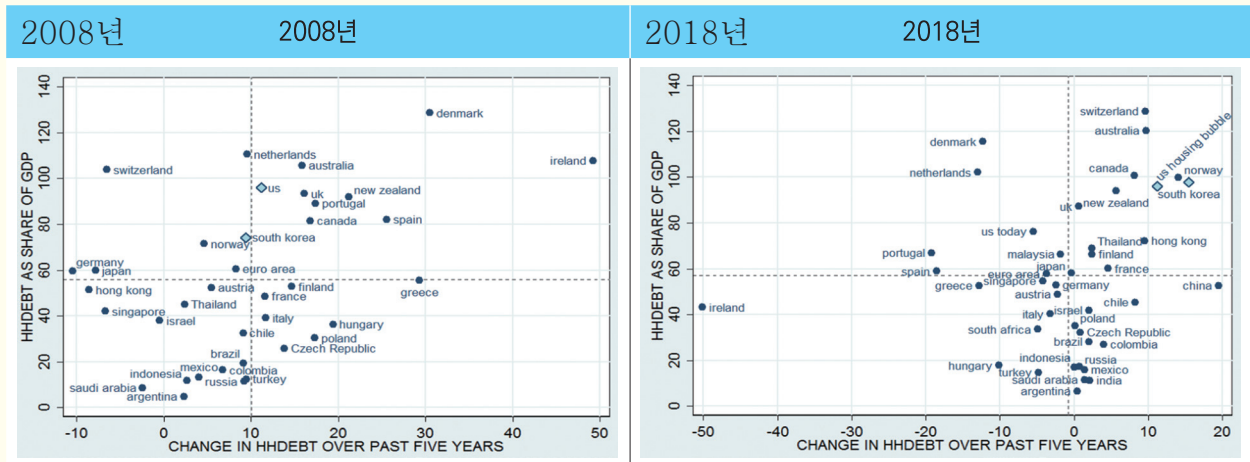
① 가계

- ▶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며 그 증가속도 또한 상대적으로 빠른 편에 속함
 - 2008년에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GDP 대비 74.2%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당시 가계부채 수준인 95.9%보다 낮았으나, 2018년에는 23.5%p가 증가한 97.7%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던 당시 미국의 가계부채 수준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 ▶ 최근 들어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및 금융자산 증가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즉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

- 또한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과,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출수준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서정호 외, 2019)

[그림 2] 국가별 가계부채 수준 및 변화

(단위: GDP 대비 %)



자료: BIS Statistics, Credit to the non-financial sector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기업

- ▶ 한국의 기업부채 비율은 2018년 12월 말 기준, GDP 대비 101.7% 수준으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
 - 국제결제은행(BIS)에서 발표하는 주요 국가들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의 평균값과 중앙값은 각각 94.0%와 83.6% 수준
 - 2009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던 GDP 대비 총기업(비금융기업)부채 비율이 2018년에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 최근 자기자본 대비 부채를 의미하는 부채비율이 하락추세에 있으나,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영업이익 감소로 인해 약화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
 -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이 2017년 9.4에서 2018년 8.8로 다소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동 기간 대기업은 9.7에서 9.2로 소폭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은 3.5에서 2.0로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
 -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작은 기업의 비중이 2014년 32.6%에서 2018년 35.7%로 증가하였는데, 동 기간 대기업은 28.5%에서 24.5%로 오히려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은 38.2%에서 47.2%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③ 정부

- ▶ 한국은 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나(IMF, 2018), 단기적으로는 정부부문 부채 수준이 재정적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 2017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수준은 일반정부 기준 40.1%, 공공부문 기준 56.9%로 OECD 평균 110.5%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적자성 채무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아직은 금융성 채무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보유 국가채무 비중 또한 2017년 기준 12.5%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2018~2022년 국가채무관리계획」)
 - 국가채무 만기구조가 안정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잔존만기 1년 미만인 국가채무 비중 또한 감소추세

〈표 1〉 2017년말 잔액기준 연도별 만기도래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1년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계
국가채무	55.2 (8.8)	133.2 (21.2)	113.3 (18.1)	158.7 (25.3)	167.0 (26.6)	627.4 (100.0)

주: () 안은 비중임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18~2022년 국가채무관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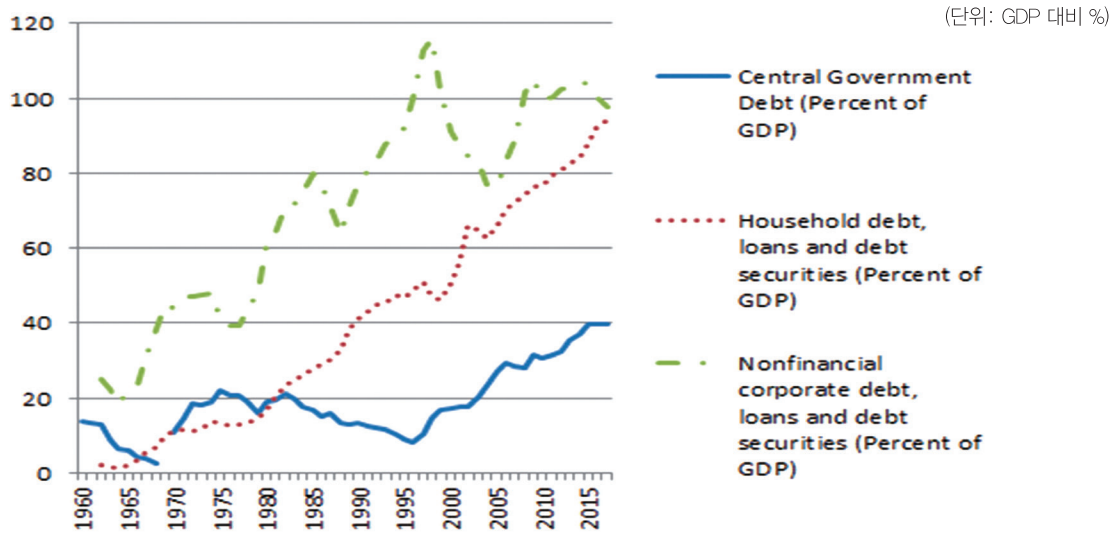
- ▶ 단,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부의 공적보증 수준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공적보증규모는 공공부문 부채에 계상되지 않으나,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이로 인해 민간의 잠재적 부채가 정부부문으로 이전될 개연성이 존재함

4 시사점

- ▶ 한국의 경우, 단기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부부채로 인해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나, 외생적 충격 등으로 인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경우, 민간의 과도한 부채가 한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규모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 아니지만, 가계와 기업 부채의 경우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으로 분류되고 있음
- 특히, 한국의 가계부채 부문이 과거 유의미한 조정과정을 거친 경험이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부분

[그림 3] 한국 경제주체별 부채 추이



자료: IMF, Global Debt Database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 따라서 민간부문의 높은 부채수준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민간부채의 정부 부채로의 이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부부채의 증가 속도와 수준을 조율하는 정치(精緻)한 정책 운용이 필요
- ▶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정부는 정부부문뿐 아니라 가계와 기업까지 포함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부채수준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 또한 정책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와 함께 각종 정부 자료에서 정부부문 부채와 민간부문 부채 수준을 함께 제시하고 고민하는 적절한 정책조합이 필요



[참고문헌]

대한민국 정부, 「2018~2022년 국가채무관리계획」, https://www.index.go.kr/com/cmm/fms/FileDown.do?apnd_file_id=1106&apnd_file_seq=20.

서정호 · 이규복 · 이기혁, 「국내 자영업자의 부채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KIF VIP 리포트』, 한국금융연구원, 2019.

윤성주, 「경제주체별 부채 현황 및 시사점」,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11.

윤성주 · 정도진 · 장석진 · 이용석, 『국가부채 현황 및 재정위험 관리방안 연구(가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IMF, Assessing Fiscal Space: An update and Stocktaking,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Policy Paper, No. 18/260, 2018.6.15.

<웹 사이트>

BIS Statistics, <https://stats.bis.org>.(접속일: 2019. 7. 31.)

IMF, Global Debt Database,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datasets/GDD>.(접속일: 2019. 7. 25.)